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8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김용민 · 박지원 · 민형배
박찬대 · 임미애 · 이주희
박성준 · 박은정 · 박주민
서영교 · 김용만 · 김영호
백승아 의원(13인)

제안이유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같이 최고 권력자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와 관련된 검찰의 부실 대응 사례 등은 검찰조직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2017~2019년 운영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훈령 기반 비상설 조직으로서 법적 강제력·자료 접근권·조사 독립성이 부족했고, 현직 검찰조직의 소극적 협조와 내부 반발

등으로 실효적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제도개선 추진이 미완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다수 제기됨.

또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권이 최고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의 대응 실패가 반복될 위험도 존재함.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청산을 넘어, 향후 공소청 체제 출범과 형사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시사함.

이에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정치적 왜곡·수사은폐 의혹 사건들을 독립적·강제적 권한을 갖춘 국가기구가 조사하고, 진상규명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책임자 조치·피해자 명예회복·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이며,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원리에 부합함.

본 법률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 및 신청에 따른 조사개시, 자료제출·출석요구·동행명령 등 강제적 조사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도, 국회 보고 및 국가기관 권고 이행 의무, 제보자 보호, 조사방해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과거사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찰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공소청 체제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여 왜곡·은폐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혁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임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1인과 국회 선출 8인(대통령 소속·소속이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밖의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추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직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안 제5조~제9조).

다. 위원은 정당원·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될 수 없고, 국회의원·다른 국가기관 공무원 등과의 겸직이 금지되며,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통해 진상규명 사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10조~제12조).

라.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사무처·자문기구를 두어 조사·심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처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 직 신분 보장과 징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7조, 제15조~제19조, 제17조~제18조, 제37조).

마.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진상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진상규명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신청 대상·방식·각하사유 및 조사개시 절차를 규정하여 남용·중복 신청을 제한함(안 제20조~제24조).

바. 위원회는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진술 청취, 자료·물건 제출 요구 및 영치, 관계기관 조회, 감정 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비공개 청문회 실시, 증인·감정인 출석·선서·증언 의무 부과, 검증 등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며, 국가기밀 자료의 제출·열람 방식 및 거부 사유,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32조, 제28조~제30조).

사.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대통령·국회 보고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종료 후에는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여 신청인·조사대상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함(안 제33조~제36조).

아. 위원·직원·자문기구 구성원·증인·참고인·감정인 및 제보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위계에 의한 직무방해 및 출석·증언 방해를 금지하고, 조사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불

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위원회는 참고인·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보상 및 사면 건의, 내부 신고자 보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제40조).

자.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활동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보고하며, 인권침해·검
찰권 남용의 원인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혁, 책임 공무원 징
계·시정, 예방·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권고를 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이행할 의무를 지며, 소관 국가기관은 이행내역·불이행 사
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41조~제42조).

차.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
고, 수사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은 신속히 조치하고 30일 이내 경과를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고
발·수사요청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법무부장관에
게 할 수 있음(안 제43조).

카. 위원회 관련 비밀 정보·자료·문서의 누설·사용 금지, 자격 사
청·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위원·직원을 형법상 공무
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직무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며, 직
무방해·허위신청·명예훼손·비밀누설·자료제출 거부·청문회 불
출석·동행명령 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 및 과
태료를 차등 부과함(안 제44조~제49조).

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는 법에 따른 조사·보고

• 권고를 통해 검찰 과거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기관의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상설적 과거사 정리 기본틀을 제시함(부칙).

검찰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2.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3.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4. 그 밖에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진상규명사건”이라 한다)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추천과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

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0조(직권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으로 제2조제2항과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1조(조사신청) ① 제3조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의 방식) ① 제21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4조(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9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검찰권의 남용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 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

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5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34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5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

하 결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결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감정인의 보호, 관련

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내부 신고자의 보호)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이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

리한 백서 각각을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5조의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 및 백서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

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사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발 또는 수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검찰과거사진상규명

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